

광주 자치구들, 자체 지역화폐 발행... '약' 일까 '독' 일까

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재정난 속 매년 수십억원대 지출 예상 광주시, 연간 300억원 투입한 상생카드와 '중복' 할인에 논란 가중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지역 내 일부 자치구들이 할인혜택 기능을 갖춘 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구는 현재 광주에서 발행 중인 광주상생카드(7% 할인)와 연계한 선불식 카드를 발행하면 주민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폭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치구별로 매년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상품권 발행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형 지역화폐 '북구사랑상품권'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구는 조만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발행신고를 할 계획이다. 북구는 또 소요 예산 100%를 구비로 충당한다.

북구는 최종 예산과 할인율, 사용 방법, 연중 발행 여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 할인율은 타 지역 지자체 화폐 할인율이 5%대라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 형태는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식 카

드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가맹점을 보유한 광주상생카드에 북구사랑상품권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이 채택되면 북구 소재 상생카드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광주상생카드 할인을 7%에 더해 북구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 다만 북구 외 다른 자치구에선 북구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북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간 소요 예산은 광주상생카드(7% 할인) 지원액이 연간 30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할인율 적용 등에 따라 매년 최대 50억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에선 북구 외에 남구와 광산구 등에서도 자체 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열린 광주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신규 지역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청에) 지역화폐는 매년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힘든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어려워진 국가 재정 여파로 광주시와 자치구의 재정 상황도 힘든 상황에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di@kwangju.co.kr



사랑나눔 김장대전

2024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2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개막했다. 가족단위로 김치타운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김장을 담고 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김장대전은 시민들이 직접 김장문화를 체험하며,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3일까지 69개 일자리 3만6348명...노인공익활동사업 등

광주시는 "오는 13일까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 등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만63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9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추진한다.

사업 유형별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2만6502명 ▲보육시설보호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5923명 ▲매장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2754명 ▲민간업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모집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시민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과 달라진 사업내용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신청 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점이 신설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희망자는 1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북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활동역량, 경력 등 기본조건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받고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을 지급받으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근무시간에 76만 1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8년간 230억원 투입해 1380개 노후주택 개보수

전국 최초 '행복동지사업' 시행 민간합동 주거복지 모델 제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주거복지 시책인 '행복동지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230억원을 투입해 1380개에 이르는 도내 노후주택을 개보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전남도의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 2018년까지 순수 지방비로 추진했으나,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2019년부터는 매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복동지사업'은 22개 시·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민관이 협업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우수사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성공적인 민간 합동 주거복지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올해 복권 기금 27억원을 포함해 모두 35억으로 173개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으며, 지금까지 230억원으로 1380가구의 주택을 고쳐줘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행복동지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출연료 특혜' 논란...김광진 전 부시장 프로그램 하차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개월만에 역대 최고액 수준의 출연료를 받아 논란을 빚은 글로벌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GGN은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OMG)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GGN은 김 전 부시장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부시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부시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5개월간 해당 방송 진행자를 맡아왔다.

김 전 부시장은 GGN 출연료 '특급' 등급으로 책정돼 매달 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시급이 3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출연료 특혜 논란을 빚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상 문제가 없는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GGN 전체로 커지는 것 같아 방송을 그만하려고 한다"며 "방송을 유지함으로써 방송국의 실무진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디자인진흥원장에 김용모 광주대 교수 임명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8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김용모(64) 광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원장은 3일부터 2년 임기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원장은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시각·포장디자인 석사, 전남대 조경·환경디자인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라

우리는 각 지방의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가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감사 전문가입니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는 정부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한 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하여 비전문가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공 재정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위협하며, 기존의 회계감사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서울시의회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의회는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조례를 신속히 위상 복원하라.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의 회계 투명성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기존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국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회계감사제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라.

국회 회계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감사 전문가가 아닌 세무사에게 공공기관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 등의 조사, 정산, 검증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이 국가 재정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역행하는 조치를 인식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결산서에 대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관리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산하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공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일동